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 논란 속 임명 강행

김수삼 이사장 "통합에 적임 … 결정적 하자 없어"

광주시·전남도의회 "오만·독선 이사장 해임해야"

김수삼 광주·전남연구원 이사장이 논란을 거듭한 허성관 초대 연구원장 내정자를 22일 임명을 강행하면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허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벌였던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연구원 정관까지 어겨가며 허 내정자 임명을 강행한 것을 놓고 김 이사장의 해임까지 주장하고 나서 향후 시·도의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 이사장은 이날 이사 간담회를 열고 일부 이사의 반대에도 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사회에서의 경험, 국제 활동 역량, 다른 지역 연구원장들과의 비교우위, 전국적 시각에서 광주와 전남을 조망할 수 있는 역량, 시·도의회와의 협력과 소통, 통합에 따른 지도력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허 내정자 임명을 반대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원장으로서 결정적인 하자가 없고 연구원 설립 4개월이 지나도록 공백상태가 이어져 선임을 더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사 간담회 과정에서 광주시 추천 이사 일부가 허 내정자 임명을 반대하며 퇴장하는 등 '내분' 양상도 보였다.

이 때문에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김 이사장이 연구원 운영조례와 정관을 어겨 원장 임명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허성관 연구원장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8조와 연구원 정관 제23조에 따라 임원 선임은 이사회 의결 사항이 분명한데도 이를 무시하고 이사회 간담회로 원장을 임명한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정행위로써 원장 임명은 무효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도의회는 "김 이사장이 시·도의회와 지역여론을 무시하고 허성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사장이 시·도민의 대의기구와 지역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혀 임명 강행이라는 독단적인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위원인 주경님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김 이사장의 독선에 따라 임명을 결정했다"며 "이사회가 정식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사장을 해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도의회 합동청문회에서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받은 허 내정자가 임명됨으로써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선 6기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상생발전협약 첫 과제 결과물이었던 통합연구원이 원장 임명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과 '생채기'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상복 터진 전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 대상 포상금 2000만원 받아

전남도가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제주에서 열린 제10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에서 '2014년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평가 결과 광역지자체 대상을 수상했다. 전남도는 장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2000만원을 받았다.

전남도는 복지수요가 많아 취약한 재정에서 차지하는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3.1%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노인복지, 여성 보육복지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산후조리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등 정부지원 사업에만 의존하지 않는 전남 맞춤형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한 것은 물론 노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회춘(回春) 공중목욕장 운영 등을 시행했다.

시군구 부분에서는 순천시와 해남군이 최우수상, 영암군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순천시는 창조복지모델인 9988쉼터의 성공적 운영, 복지 전달체계 개편 모델인 '행복동' 시범사업 실시, 해남군은 전남지역 최초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개관을 통한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등의 정책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을지연습 정부평가 '최우수' 대통령상

전남도는 22일 "지난 8월 실시된 '2015년 을지연습' 정부평가에서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서 전남도는 긴 해안선과 많은 도서, 한빛원전, 여수국가산단 등 주요 시설이 위치한 지역 특성에 맞춰 실제 훈련과 도상 훈련을 실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각종 훈련과 보고회마다 이낙연 전남지사와 김영선 행정부지사가 적극적으로 참석한 점도 평가에 플러스 요인이 됐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제주에서 열린 제10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에서 '2014년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 평가 결과 광역지자체 대상을, 행정자치부 등 28개 관계 중앙부처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2015년도(2014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8개 분야 가운데 '보건위생', '지역경제', '중점과제' 등 3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각각 획득했다.

전남도는 지난해와 2013년에는 '가' 등급 1개를 받는 등 최근 4년 동안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한중 학생 교류 확대 합시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22일 중국 칭화대에서 '21세기 청년의 비전과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한·중 청년들이여 창조적 도전 정신을 가져라"

윤장현 광주시장, 中 칭화대서 특별강연

윤장현 광주시장은 22일 중국 칭화대 해외명사전당에서 '21세기 청년의 비전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윤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한중 청년 학생이 동행을 모색하고 꾸준히 교류를 확대하면 희망의 길은 빛을 발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창조적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광주시가 추진중인 '중국과 친해지기' 정책에는 두 나라 젊은이의 탐구심 자극과 유대감 강화를 위한 정책이 포함돼 있다"며 "서로를 이해하고 우수성과 장점을 교환하며 함께 길을 나선다면 공동의 목표인 인류평화의 큰 길이 펼쳐지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유머를 곁들인 특유의 화법으로 자신의 삶의 역정, 광주와 시정 소개, 지구촌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역할, 중국과 광주의 교류·협력 방안 등을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는 등 호응을 얻었다.

윤 시장은 자신을 대한민국의 제1호 한·중 우호광역시 건설을 추진하는 광주시장으로, 광주를 자랑스러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간직한 영원한 청춘의 도시로 소개했다.

사회적 약자, 지구촌이 봉착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청년 학생들의 관심도 당부했다.

윤 시장은 '세상은 바뀌어도 이웃은 바뀌지 않는다'며 중국과 광주와의 교류 및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특히 한중 우호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광주는 '칭화포럼'을 개최해 인문, 문화, 과학, 경제 교류의 지평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칭화대 교수 및 연구진과 협력해 아시아의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한중 청년 인문교류 프로그램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시장은 21일 인민일보, 신화사 등 현지 언론과 간담회를 하고 광주시의 차이나프렌들리 시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이어 문화관광 투자유치설명회를 열고 '중국 1만명 노인 교류행사 유치' 업무협약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복지재단대표 재공모 과학기술협력센터원장 공모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와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GSTEC) 원장을 공모한다.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군산대 엄기욱 교수가 내정됐으나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한 데 따른 재공모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접수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추천된 복수 후보에 대해 재단이사회 의결 뒤 시장이 최종 후보를 내정한다. 내정자는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며 연봉은 9000만원 선이다.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는 국내외 우수 과학기술인력 유치와 연구 지원을 위해 2008년 설립됐다. / 최권일기자 cki@

양곡가공업체로부터 뇌물 무안군 공무원 파면

감사원 감사결과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이 양곡가공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져 파면 조치되게 됐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7급 공무원 A씨는 정부관리양곡 가공 계약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앞으로도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업체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양곡가공업체 대표에게서 616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감사원은 무안군수에게 A씨를 파면하도록 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 영광군은 수산물유통물류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용도로 국보조고금(17억5000만원)을 지원받은 후 용도로 달리 특정업체만을 위한 장어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하도록 B업체에 부지를 부당하게 매각했다. 감사원은 장어유통물류센터로 건립되는 건물을 설계변경해 유통시설을 갖추도록 했고,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영광군에 통보했다.

강진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2억4천500만원을 자신이 직접 부담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군에 제출했는데도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된 국비 5천670만원을 회수하도록 강진군에 통보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